제2019-1호 (통권 22권)

NEWS 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인 _ 박찬욱
발행처 _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_ 2019년 6월

CONTENTS

권두언 04
교육부 학술지원 정책과 한국 사회과학 분야
한정훈(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심포지움 06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과학분야 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움
엄석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08
4차 산업혁명시대, 'EDUCE'의 철학을 생각한다
박길성(한국사회학회 회장,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남기고 싶은 이야기 10
Global Academy of Policy and Social Science 신설
원우현(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제 14대 회장)

각학각색(各學各色) 12
노인빈곤 해법은 무엇인가

학회동정 17

협의회 행사 19

협의회 임원진 21

교육부 학술지원 정책과 한국 사회과학 분야

한 정 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하 협의회) 사무국장 일을 담당하면서 두 번에 걸쳐 교육 부총리를 면담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다. 교육 부총리를 면담한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속한 분과 학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학계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사실 면담은 협의회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지원 체계를 개편하려는 교육부가 개편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인문학 쪽에 용역과제를 부여하였고, 인문학 내에서 과제수행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부총리와의 직접적인 면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결과였다. 따라서 인문학 내 HK 사업단 대표, Core 사업단 대표를 포함하여 전국 인문대학장 대표 등 다수의 인문학자가 이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사회과학분야의 참여는 협의회와 전국사회과학대학장 연합 두 기관으로 제한되었다. 교육부가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반의 지원 체계 개편을 내세웠지만 주요 관심이 인문학 지원 체계 개편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소외를 경험했던 면담이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총리 면담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첫째, 교육부와 다양한 학문 분과 간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교육부총리를 포함하여 교육부 및 연구재단의 학술지원 관계자들과 만난 목적은 자연계 및 이공계와 비교하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지원되는 학술사업 유형의 정비와 연구비 예산 배정의 형평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인문사회 연구개발 예산의 비율이 겨우 1.5~1.6% 밖에 차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2018년 기준 인문사회 연구개발 예산이 이공계 연구개발 예산의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0.2%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공계 예산은 8.1%씩 증가하고 있는 비대칭적 지원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놓였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양자 모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해결방안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용역 사업 등을 통해 인문학 분야 내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반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의 사업개편 의도를 간파하고 있지 못했던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무관심을 문제시 할 수 있다. 또는 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가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틀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 분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태도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을 것 같다. 학술지원 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해 인문학 분야의 의견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공계열의 의견도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소통과정을 통해 학술지원체계 개편방향에 대하여 각 학문 분야별로 복수의 안이 제시될 수 있었다면, 학술지원체제의 개편은 더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바탕을 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학계로부터 전반적인 동의를 구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단일한 정책안을 중심으로 정책방향 개편을 협소하게 논의하는 특징은 교육부에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정책방향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특정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을 책임질 학문후속세대 및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위와 같은 협소한 정책논의 과정을 탈피하는 출발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경험이었다.

둘째, 한국 사회과학 내 분과학문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의 역할 부분이다. 학령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대학 신입생들의 실용학문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공통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가 주관하거나 공동주관하는 심포지엄 및 워크숍 또는 모임 등에서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과학 내 분과학문 간 소통과 협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교육부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강화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러한 노력은 인문학 분야와 비교해서도 매우 빈약한 것 같다. 협의회에 소속된 15개 주요학회 각각이 유사한 걱정과 우려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의 과제로 수렴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변화가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개별 학회 수준에서 다루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역시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과학 분과별 주요 학회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상위협회(umbrella association)로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협의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사회과학 내 분과 학문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협의회 조직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벅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예산과 조직이 매우 열악한 것이다. 사회과학 내 모든 분과가 지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노력은 잘 알려진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과학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상호 협력과 자발적 기여가 절실하다.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의회의 능력 안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 학회들이 그러한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한국 사회과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논의의 수렴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1976년 설립된 후 어느덧 43년의 역사를 거친 조직이다. 한국 사회과학 분과 학문들의 상위협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과학 내 각 분과 학문이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은 협의회의 이름 아래 회원 학회들을 조직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교육 정책, 특히 사회과학 정책 분야는 협의회가 제한적이나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영역일 것 같다.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과학분야 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움*

엄 석 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과학분야 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움」이 2019년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발전과 그것이 추동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과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대학원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총 7개 사회과학 분야 대학원에 소속된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학(발표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 행정학(서울대 행정대학원 엄석진 교수), 경제학(서울대 경제학과 김영식 교수), 정치학(서울대 국제대학원 한정훈 교수), 사회학(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지리학(서울대 지리학과 손정렬 교수), 언론정보학(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분야(발표순)의 대학원 교육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각 분야별로 발표 내용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1)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2)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해외 유수 사회과학분야 대학원 및 국내 주요 대학의 교과과정 분석, (3)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연구주제 및 교육방법의 혁신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각 세션별로 지정토론(토론자: 서울대 정치학과 안도경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한준 교수)이 이루어졌다.

각 분야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와 관련된 과목들이 대학원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외에서 제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최근의 기술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본격적으로 다룬 교과목들이 대학원 교육과정에 정규 교과목으로서 충분히 개설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다수였다. 현재로서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기술지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과학, 나아가서는 사회과학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이 있었다.

둘째, 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측면들 중 빅데이터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과학분야 대학원에서도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 2019년 5월 24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과학분야 대학원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원고는 심포지움 내용의 일부를 간추린 것입니다.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사회과학분야에서의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의 기반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의 기술발전에 따라 온라인을 포함한 비개입적, 자동적 데이터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데이터의 규모, 증가속도,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도 과거의 데이터를 압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대학원에서의 빅데이터 분석기법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융 · 복합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 기술적 동인에 의해 촉발되는 현상으로 공학적 지향(orientation)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공학적 기술의 발전과 사회과학적 연구 및 교육간의 융 · 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과학분야 대학원에서의 양적분석방법 교육의 개편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었으며, 인공지능 등 단기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의 경우, 자연과학분야 및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분야들간의 협력과 융합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기반이 다른 학문분야간의 융합과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질문으로 남겨져 있다.

넷째, 교육공학적 시각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교육방법의 혁신이 강조되었다. 이미 해외 유수의 대학들은 MOOC 등 온라인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발표자들 중 일부는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학원 교육방법의 혁신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MOOC나 화상회의 시스템에 기반한 교과목 운영 뿐만 아니라, 최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혁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각 학문분야별로 차별화된 주장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사회과학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과과정의 변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해 온 언론정보학이나 현실에 대한 처방지향적, 실무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학의 경우, 관련 교과목들이 타 분야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설되고 있거나, 기술발전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정보학의 경우, 제 4차 산업혁명의 심화에 따라 미디어 자체의 변화와 미디어와 인간간 상호작용의 변화가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남에 따라 대학원 교육에 있어 다른 학문분야보다 좀 더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행정학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보기술의 행정에의 도입과 관련된 교과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주요대학에서부터 데이터 분석기법, 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 및 그에 따른 윤리와 거버넌스 이슈 등을 다룬 교과목들이 공식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학문분야별로 차별화된 강조점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재조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 온 사회학의 경우,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다양한 불평등이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학의 주요 이슈들은 이미 제 4차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미 연구논문 등으로 다수 출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철학의 유산이 강한 정치학의 경우,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와 정치철학적 유산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를 다루는 지리학에서는 기존에 시도되었거나 필요성이 인식되었던 다양한 연구주제와 교육방법론을 새롭게 조명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그동안 연구중심대학의 개념과 그 제도화 등 연구와 교육이 결합된 고등교육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분야 대학원 교육의 현황 및 혁신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심포지움은 사회과학분야 대학원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첫 출발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사회과학의 여러 다양한 분과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함으로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공통된 환경변화에 반응하는 각 학문분야의 특수성과 사회과학으로서의 보편성이 고루 논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심포지움의 기획 및 설계는 한국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과들의 연합체인 한국사회과학협의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되어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존재 이유와 의의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심포지움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심포지움을 좋은 출발로 삼아, 사회과학분야 대학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 ‘EDUCE’의 철학을 생각한다

박 길 성
한국사회학회 회장,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EDUCE란 교육 education의 라틴어 어원이다. ‘이끌어낸다’ ‘끄집어낸다’는 뜻이다. 풀어보면 교육이란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역량, 창의력,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소양을 격려하고 눈여겨보면서 사고력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끌어낸다 · 끄집어낸다’와 ‘전수한다 · 주입한다’는 패러다임 수준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교육자의 본질적인 책무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내어 키워주는 일이다. EDUCE 메시지는 지식이란 주입할 수 없으며 질문과 대화를 통해 학생이 품고 있는 사고력과 잠재성을 이끌어내는 일이 교육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산파법과 맥을 같이 한다.

근자에 들어 이러한 EDUCE의 관점과 실행은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더욱 필요해 보인다. 유발 하라리 Yuval Harari는 최근의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에서 인류는 지금 유례없는 혁명기에 직면했다라고 전제하며 〈교육〉을 다루는 장에서 우리가 아는 옛 이야기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반면, 그것들을 대신할 새로운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고 거론하면서 이토록 전례 없는 변혁과 뿌리째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비시켜야 할지의 질문을 던진다.

지식의 절반이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는 시간의 길이를 지식의 반감기(half-life of knowledge)라고 한다. 사무엘 아브스만 Samuel Arbesman은 [지식의 반감기]의 저서에서 정보학자 롱 탕 Long Tang의 2008년에 조사한 학문 분야별 반감기를 소개한다. 물리학 13.07년, 경제학 9.38년, 수학 9.17년, 종교학 8.78년, 심리학 7.15년, 역사학 7.13년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학문 분야마다 다르지만 사회과학의 경우 대략 7년으로 통용되곤 한다. 지식의 반감기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점점 짧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실제로 오늘날 학문 분야에서 지식반감기가 현격하게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식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배운 지식의 절반이 환경 변화로 쓸모없게 되는 기간이 더욱 짧아지면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절반이 무력해지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와 같은 대학의 존립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곤 한다. 이러하기에 이런 시대 환경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실의 공간에서 지식 전수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를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지식을 전수하는 곳으로서의 대학은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났다. 장소로서의 대학의 의미도 쇠퇴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대안 대학이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답 맞추기형 교육, 문제풀이형 교육, 스펙쌓기용 교육으로는 시대가 요청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해 진다.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이 기존 교육 방식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거꾸로 교실이 끄집어내라는 교육의 본유적 의미에 가까운 학습이기 때문이다.

'거꾸로'란 교실 중심의 강의식의 지식 전달과 전수라는 기존의 방식을 뒤집는 다는 뜻이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일방적에서 쌍방적 나아가 다방향적으로 형성된다. 논의되는 지식의 범위 역시 강의 중심의 한정적에서 방대한 외부 자료의 활용과 집단토론에 의한 무한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학생들의 역할도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동적인 행위자의 모습으로 바뀐다. 학습의 가치도 암기력 위주에서 상상력 위주로 방점이 옮겨간다.

단순히 정형화된 교과 과정의 내용을 가르치는 수단적이고 기능적인 활동으로서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잠재가능성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보다 본질적인 교육의 의미에 충실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지식 전달을 넘어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하는 능력,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자의 역할이다.

인재를 키우려면 가르치거나 주입시키지 말고 질문하게 하라는 주문이나 질문을 통한 상상력을 유도하라는 주장 모두 이끌어내고 끄집어내라는 교육의 본래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차고 넘친다. 심하게 표현하면 정보가 넘쳐 멀미가 날 정도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며,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며,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EDUCE의 교훈을 다시 강조하는 까닭이다.

Global Academy of Policy and Social Science 신설*

원 우 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제 14대 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창립 후 이사회에서 합의해서 학문적으로나 행정력에서 적합한 학자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으로 추대, 선임하는 전통을 자랑해왔습니다. 필자는 이사회 합의 후 14대 회장 수락 여부에 관한 저의 의사를 묻던 한 선배 이사님을 통하여 협의회 회장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본 협의회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여 협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하셨습니다. 한국 사회과학 분야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대표하도록 전통적인 위상을 되찾길 원하신다던 말씀이 이상하게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05년 3월 16일 회장으로 선임된 직후는 우선 협의회의 실체를 홍보하고 마중물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운영 계획은 제가 풀어야할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누적된 과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즉 사회과학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절차 면에서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약을 제정하고 새로운 기본 방향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OSSREC.ORG 홈페이지 역시 재정비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들 과제는 다행히 집행부와 협력하여 잘 풀어나갔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동안 이사회가 지녔던 독점적인 권한을 전 회원과 집행부에 일부 양도하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으로 규약과 제도를 개선하였던 노력입니다. 협의회는 설립 초기부터 전통적으로 학계 엘리트나 선별된 학자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결정권도 자연히 대부분 이사회에 귀속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우선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라는 기존의 명칭을 한국사회과학협의회로 바꿨습니다. 단 영문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회장직의 연속성과 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차기 회장제를 신설했습니다.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1년 경과 후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 임기 만료시 자동적으로 회장을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협의회 소속 회원 학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협의회 설립시 회원 학회는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언론학회, 국제정치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교육학회, 경제사학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지리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등이

* 2016-1호부터 협의회 초창기에 참여한 원로 회원들의 원고를 받아서 뉴스레터에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들은 장차 본 협의회의 역사를 단행본으로 간행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의 임기 전후에 추가로 참여한 것입니다. 넷째, 각 회원 학회가 실질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운영위원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즉 정관 개정을 통해 본 협의회 이사회는 물론 회원학회도 운영위원회는 물론 회장, 임원, 이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조직적 정비 이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연구기능만 가능하던 협의회에 교육기능을 최초로 도입한 것입니다. 협의회 산하 부설 기관으로 교육기관인 글로벌 정책 사회과학원(Global Academy of Policy and Social Science)을 신설한 것입니다. 필자가 초대 원장을, 사무총장은 기영화, 은재호 교수님이 임명된 후 계속 맡아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용덕(당시 원장) 교수님 협조로 브르네이 공무원 강의를 보람 있게 진행하던 기억도 새삼스럽습니다.

인사가 만사임을 믿고 안병영 이사님과 협력하여서 정운찬(당시 경제학회 회장 겸 서울대 총장) 교수님을 차기 회장으로 모시려고 삼고초려 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연구위원회, 편집, 행정 집행 위원회를 개방하고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분야의 최우수 학자라는데 중지가 모아지면 주저 없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계의 중론을 수집하여 편집위원장 전영섭(경제학), 김선혁(행정학), 함재학(법학) 등 모든 위원을 직접 연구실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겸손히 수락을 요청하던 그때 그 장면과 대화 내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기 중에 편집위원회는 한국사회과학저널(KSSJ)을 속간했을 뿐 아니라 SSCI 등재지 목표를 위해서 전영섭 편집위원장을 필두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평론 역시 편집위원회에서 출간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포럼을 열고 신광영 연구위원장, 연구위원 김성호를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님을 적극 지원하고, 회원 간의 소통과 대외 네크워크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얻어 〈사회과학 학술논문상〉을 신설했던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상은 1년 2회 발간되는 한국사회과학저널에 게재된 영어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윤영섭 부회장과 협력하여 양영재단이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고 김상홍 삼양사 명예회장님의 조건 없이 순수하게 재정 지원을 결정해주신 지도력에 깊은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2007년 사회과학 학술논문상은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장유상 교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인 국제교류 협력 부분에서는 IFSSO (Internatioal Federation of Social Science Orgarnizations), AASSREC(Association of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Unesco 등과 국제교류를 촉진했습니다. 그중 학술대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예컨대 2007년 9월 27일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13개 회원국과 4개 옵저버(Observer)국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한국 대표로 정운찬 차기회장이 참여하였고, 정대연 교수님이 "Toward Sustainable Society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14대 회장 임기 중 가슴속에 기억에 남는 분들은 〈행정집행위원회〉 여러분들입니다. 위원장 노기영(한림대, 현재 Distinguished Professor) 교수를 비롯하여 김청택, 이숙종, 조남재, 박종민(현재 경희대 사회과학원 원장) 교수와 간사 천명기(미국대학교 조교수), 김량하씨가 생각납니다. 본 협의회의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본 협의회 과제를 수행하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신 집행위원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혁의 고비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량으로 수용해 주시고 오히려 저를 격려하셨던 그 당시 이사회 이사님과 모든 임원진에게도 감사와 새삼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2년간 본 협의회 회장이라는 책무가 저에겐 과중했었을 뿐 아니라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비한 여건으로 인해 한국사회과학의 진로를 더욱 다지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서 돌이켜 보면 저의 임기중 모든 결실은 회원학회와 회원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채워주시고 본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 한국 사회과학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선 더욱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재정적 안정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안민정책포럼,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SSK-Networking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화두와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망하는 취지의 기획 기사를 '각학각색(各學各色)'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기사 한 건을 여기에 전재합니다.

SPECIAL REPORT

본지·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 공동기획 '각학각색(各學各色)'

노인빈곤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일 때가 많다. 한정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시각과 자세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와 공학자가 만나 인공안구를 만드는 시대다. 본지는 사회과학협의회(회장 박찬욱)·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SSK네트워크 지원사업단(한국연구재단후원)과 공동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화두와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망하는 취지의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열세 번째 주제는 경제학·사회학·정치학·사회복지학 등 4개 분야의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의 배경과 전망, 대책 등을 진단·조언했다. 분야별 시각 차이를 흥미롭게 살펴보다 보면 자연히 융합의 눈을 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학제 간 협력을 위해 1976년 설립된 15개 사회과학 분야 학회의 연합체다.
안민정책포럼은 좌우통합을 위해 고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1996년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경제학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제도 참고할 만

노인소득 보장 기준 금액 부족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필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2.5%)에 비해서 3.7배 수준인 1위다. 물론 인구의 절반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빈곤율 개념은 상대 빈곤의 개념이다.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노인수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이 되면 은퇴로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소득 혹은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없으면 빈곤할 수밖에 없다.

노인빈곤율이 낮은 나라는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도입(1988년)이 늦어져 공적연금이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72만명에 이르지만, 월평균 연금액은 39만8000원이고,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105만 명이다. 더구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0만 명이지만, 취업자(2746만 명)의 20%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는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연금 사각지대가 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해야 연금을 지급하는 갹출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만 현재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노인 70%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이름으로 월 2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국민연금이 미치지 못하는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

기초연금 확대에도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70%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연금소득만으로 빈곤율을 낮추려면 중위소득 50%인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5만3000원, 2인 가구 기준으로 145만 3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만으로 이를 해결 하기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비용 부담을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2019년 15조원, 2022년 19조9000억원, 2026년는 26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해 부담이 급격히 커져 2060년경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 내외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지겠지만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타깃팅을 빈곤노인을 중심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위소득 노인 70%에게 정액의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는 한계가 있다. 근로기간에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상응해 지급하는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정한 노인소득 보장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재원이 한계가 있는 구조에서 노인빈곤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다 최저보증연금제도로 전환한 스웨덴의 1992년 개혁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GDP의 3%에 이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세 신설 등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사회학

사회복지 지출 확대만으로는 역부족

노인의 일상적 · 정서적 빈곤까지 해결 필요…민간의 봉사활동 역할 늘려야

김지범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통에도 노인들이 빈곤의 사슬에 묶여 있다. 500원 동전을 받기 위해, 한끼를 공짜로 해결하기 위해 줄 서 있는 노인, 폐지를 줍는 노인, 쪽방에서 텐트 치고 겨울을 보내는 노인, 고독사 노인, 세계 최고라는 노인 자살에 관한 뉴스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모든 노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끈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는 현실은 안타깝다.

정부는 사회보장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 법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경제적 안정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국민 연금제도는 1988년에야 실시됐고,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은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노인빈곤의 문제로부터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보장제도 연계 · 조정' 을 원칙으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기초연금 인상,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센서스에 따르면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가구이고, 이들의 80%는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다. 2017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이들의 35%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고, 74%는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35%는 이야기 상대가 없다. 과연 정부의 역할만으로 노인의 일상적 · 정서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요구된다. 정파 · 계층 · 세대 간 이해관계로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확대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저출산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대변혁으로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7조 1항에서는 국민에게 자립의 책임이 있고,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정신적 ·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노인돌봄서비스를 60%가 정부, 7%가 사기업 · 영리 단체, 17%가 비영리단체 · 자선단체 · 협동조합, 3%가 종교단체, 14% 가 가족 · 친척 · 친구가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간 역할 중 봉사활동을 생각해본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18 세계기부지수' 의 봉사활동을 보면 145개국 중 미국 8위, 일본 56위, 대만 75위, 한국 96위, 중국 133위였다. 2018년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년 전과 비교해서 20세 이상의 봉사활동이 1.6%포인트 증가한 12% 수준이고, 노인의 6%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활동은 봉사 수혜자에게는 사회적 위험을 줄여주고, 봉사 제공자에게는 정신적 · 신체적 건강, 타인과의 연결, 삶의 의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책임이란 전제조건 아래 국민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봉사활동 참여 기회가 잘 마련된다면, 상부상조의 전통을 계승한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리라 기대한다.

김지범 교수는…

서베이리서치센터 센터장이자 세계조사학회 출판위원장을 맡고 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경제학

대의제 원칙으로 노인빈곤 해법 도출 가능

대표자와 시민의 긴밀한 정치적 연계 구축…자원배분 원칙과 사회적 가치 합의 유도에 적합

박영환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 사회는 2017년 유엔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는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전체 인구 5175만3820명 중 725만7288명(14.02%)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였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속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층 빈곤 문제는 매우 우려할 수준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을 조사한 2015년의 OECD 조사에서 한국은 노인 전체 인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6%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였다. 고령층에 대한 낮은 복지 지출, 연금제도의 미정착, 고령층의 낮은 고용율, 저임금 및 임시·일용직의 취업 기회 감소 등이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부채질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긴 기대수명과 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 인구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노인세대가 사회의 전 세대와 계층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층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됐다.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는 기회구조가 축소되고 소비 위주의 생활이 주를 이룬다. 신체적 노화와 함께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발생하면서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는 단순히 소득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빈곤의 해법이 경제적 접근에만 머물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제도 구축과 복지 실천 역량 증진이 필수적이다. 사회집단의 생활방식은 구성원 간 도덕적·가치적 기준의 합의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사회조직의 원리에 기초해 결정돼야 한다. 노인빈곤 문제에서 정치학적 해법의 유용성이 여기서 발견된다. 정치학적 해법은 사회적 통합과 자원의 배분을 위한 결정·운영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의 토대 위에 노인 복지의 구성요소를 결정할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가 단순히 소득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누적된 삶의 방식과 관련한 측면이라면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정치학적 해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유용한 접근이다. 일반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권력을 위임 받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오늘날 대의정치 체제는 과거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정과 달리 대표자와 시민 간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대리인(대표자)은 주인(시민)에 의해 부여된 신임을 훼손시키면 재선에 실패한다.

그러므로 시민이 원하는 요구를 정책전환 과정에 잘 반영해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낼 유인이 대표자에게 존재한다. 이런 대의제의 작동원리는 노인빈곤 해법에 대한 자원배분의 원칙과 사회적 가치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회가 직면한 긴급 현안에 대해 집단과 계층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동질적인 연대감과 집단의식은 대표자로 하여금 집단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이슈를 성공적으로 의제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한다.

사회적 위치에서 정체성을 자각한 시민과 집단의 잘 정리된 요구와 이해관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표자의 정책적 반응성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결국 대표자와 시민(집단)의 긴밀한 정치적 연계에 따라 작동되는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공동체의 자원 배분과 사회적 가치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필요로 하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박영환 연구원은…

한국정당학회 기획이사와 미래정치연구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대한정치학회보 편집이사, 한국정당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사회학

〈정액연금+보충연금〉

'이원적 기초연금' 체계 도입할 필요

국민연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액 기초연금의 급여 인상은 구조적 한계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빈곤율이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평균적으로 12% 내외 수준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아동과 성인 빈곤율은 10% 미만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유독 노인의 경우에만 50%에 육박하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이 이처럼 심각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전인 시장소득에서는 빈곤율이 69.4%로 높지만, 정부가 소득보장 급여를 제공한 후에는 12.8%로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 개입 전과 후의 빈곤율이 각각 62.8%와 45.7%로 정부 소득보장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현저하게 취약하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노령 및 유족 급여 지출이 GDP의 8.2%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2.6%에 불과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OECD 국가들과 달리 정부 소득보장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에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 인상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 논의는 현재의 노인들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활동 연령층의 미래 급여에 대한 것이다. 현재 노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민연금은 약 650조원의 거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다. 이 거대한 기금을 풀어서 현재 노인들에게 쓰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장기 재정 불안정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연금이 그나마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저축해 놓은 기금을 지금 다 써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기초연금 급여는 현재의 노인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다.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노인빈곤은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정액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국민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면 국민연금과 더해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과도해질 수 있다. 정액 기초연금의 인상 때 국민연금과의 구조적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보험제도가 없는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정액 기초연금을 도입한 반면, 이런 공적연금보험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으면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액 기초연금에 더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소득을 보충해 주는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결합하고 있다.

노인빈곤에 대응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할 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전체 공적연금의 차원에서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액 기초연금의 급여를 높이는 것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액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하면,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 소득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가 추가돼야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를 정액 기초연금에 더해 보충연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이원적 기초연금(=정액연금+보충연금)'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원적 기초연금의 구축과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E

이상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역임했다.

학회동정

경제사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5월 25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 : 광주여대 정보통신관 세미나실

국제개발협력학회

〈제 26차 정기 하계학술대회〉
- 주제 :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이해: 도전과 전망
-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09:30~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대한지리학회

〈2019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6월 21일(금)
- 장소 :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한국경영학회

〈2019 제 21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8월 19일 (월)~21일(수)
- 장소 :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한국경제학회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2월 14일(목)~15일(금)
- 장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한국교육학회

〈2019년 연차학술대회〉
- 주제 :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포용, 그리고 교육
-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29일(토)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 주제 : 저항 민족주의를 넘어 :
  동북아 평화 협력을 향한 한국외교의 새 지평 모색
-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하계학술대회〉
- 주제 : 세계질서에 대한 지역적 시각 :
  도전과 대응 (Regional Perspectives on World Order Challenges and Responses)
- 일시 : 2019년 7월 4일(목)~6일(토)
- 장소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61차 정기학술대회〉
- 주제 : 땅과 인간: 소유와 공유, 죽임과 살림, 재생과 건설
-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한국사회복지학회

〈제 3차 포용복지포럼〉
- 주제 : 한국 사회정책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향하다
-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09:30~17:00
- 장소 :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19층)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공동개최 제17회 전국사회학과대학원생 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2월 22일 (금)
- 장소 : 연세대학교

〈한국사회학회 · 한국경영학회 공동주최 학술행사〉
- 주제 : 디지털 기술발전과 기업 및 사회의 변화
- 일시 : 2019년 6월 18일 13:00~18:00
- 장소 : 광화문 포시즌 호텔 그랜드볼룸

한국심리학회

〈2019년 연차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24일(토)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한국언론학회

〈2019 한국언론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주제 : 언론학 60년, 돌아보고 내다본다
- 일시 : 2019년 5월 18일(토)~19일(일)
-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 주제 : 페미니즘 '들' 시대의 반페미니즘
- 일시 : 2019년 6월 15일(토) 오전 10:00~18:30
- 장소 : 인천대학교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 주제 : 남북관계의 변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13:30~17:30
-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

한국행정학회

〈2019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 주제 : 현장중심의행정학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1)
-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29일(토)
- 장소 : 경성대학교(부산)

협의회 행사

01 협의회 회의

- **2019년 집행부 1차 회의**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12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2019년 집행부 2차 회의**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12시
  장소 : 서울대 경영대 소담마루

- **2019년 제 1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9년 3월 22일(금) 12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 **2019년 제 1차 운영협의위원회**
  일시 : 2019년 3월 29일(금) 12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 **2019년 전임회장단 간담회**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12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02 학술 활동

1)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주제 : 지역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장소 :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2) 미래연구원과 학술회의 공동 개최

주제 : 서예 류성룡의 현대적 조명
일시 : 2019년 4월 19일(금) 14:00~18: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3) 한국문화인류학회와 심포지움 공동 개최

주제 : 땅과 인간 : 소유와 공유, 죽임과 살림, 재생과 건설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09:30~18:3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4)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과 심포지움 공동 개최

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과학분야 대학원교육 발전방안
일시 : 2019년 5월 24일(금) 10:00~16:00
장소 : 서울대 사회대 국제회의실
후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네트워킹지원사업단 등

03 중앙 이코노미스트 "각학각색(各學各色)" 연재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안민포럼, 중앙 이코노미스트 공동 기획

주 제	게 재 일
노인빈곤 해법은 무엇인가	2019년 4월 1일

협의회 임원진

회장단

	성 명	소 속	비 고
회 장	박 찬 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전)한국정치학회장
부회장	김 정 식	연세대 경제학	(전)한국경제학회장
	김 의 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전)한국정치학회장
	김 성 열	경남대 교육학	(현)한국교육학회장
	김 동 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현)한국행정학회장
	박 길 성	고려대 사회학	(현)한국사회학회장
감 사	변 종 국	영남대 경영학	
	서 현 진	성신여대 사회교육학	

이사회 (성명 가나다순)

성 명	소 속
백 완 기	고려대 행정학
안 병 영	연세대 행정학
원 우 현	고려대 언론학
이 진 규	고려대 경영학
이 종 원	성균관대 경제학
임 현 진	서울대 사회학
임 희 섭	고려대 사회학
정 용 덕	서울대 행정학
정 운 찬	서울대 경제학
차 재 호	서울대 심리학
한 상 복	서울대 인류학

집행위원회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연 구	한 준	연세대 사회학	위원장
	김 석 호	서울대 사회학	
	김 옥 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박 정 수	서강대 경제학	
	배 영	숭실대 정보사회학	
	서 은 국	연세대 심리학	
편 집	엄 석 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위원장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	
	조 명 환	서울시립대 경제학	
	최 성 주	경희대 행정학	
	하 병 천	서강대 경영학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김 세 건	강원대 인류학	
	박 상 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학	
	박 은 실	추계예술대 예술경영	
	박 경 미	전북대 정치외교학	
	이 승 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사 무 국	한 정 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장
	전 성 희		간사

운영협의위원회

학 회	성 명	소 속
경제사학회	정 성 일	광주여대 서비스경영학
국제개발협력학회	권 혁 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이 용 우	국토연구원
한국경영학회	김 용 준	성균관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이 인 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한국교육학회	김 성 열	경남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손 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임 경 택	전남대 일본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정 무 성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한국사회학회	박 길 성	고려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조 현 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
한국언론학회	이 재 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한국여성학회	신 경 아	한림대 사회학
한국정치학회	장 훈	중앙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김 동 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 (Sajik-dong), Jongro-Ku, Seoul, 03028, Korea
T. 82-2-735-2159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이 뉴스레터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3923036)